

이권 자료시		
98 5/4	AK	196

**전경련의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부담금 폐지'  
주장에 관한 우리의 입장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1998. 4. 17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부름의전화(김정희) 삼육재활센터(민군식)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용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조규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이재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김성재) 전국장애인가족협회(이석형) 정신지체인부모연합회(유명우) 정신지체인권익실천을위한성남부모회(김희경) 연화원(방해성) 원심회(석덕신)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김수경)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임통일) 한국보장구협회(문한석) 한국장애인부모회(엄요섭)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윤홍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양동춘) 한국장애인재활협회(조일묵) 한국제활재단(박기업)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김 원) 한벗회(채규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배연창)

## 성 명 서

###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

우리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지난 3월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제출한 '70대 핵심규제 개혁 과제' 내용 중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고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까움을 밝히는 바이다.

작금의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제 폐지'로 장애인등의 소외계층에게 경제위기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기업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사회 장애발생율은 88%정도가 후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천적 경우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산업재해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업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매년 의무고용제를 1%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전경련이 이번 IMF 구제금융체제에서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게서 일터를 빼앗아가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니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암담함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적합직종이 없기 때문이며 30대 재벌의 경우 장애인 미고용사 연간 300억 이상의 부담금을 내고 있으니 말 그대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인데, 전경련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 장애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사회의 부당한 차별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궁극적으로는 생계유지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마련되어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특히 이 법의 주요골자가 '2% 의무고용제'와 그에 따른 '부담금부과'이기 때문에 전경련의 이러한 제안은 법 이념 자체를 혼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무고용제는 없어도 15인 이상 사업체에서 능력있는 장애인을 부당한 차별로 고용하지 않았을 때, 처음엔 5만달러, 그 이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만달러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으로 몇 %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장애인고용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는가! 현재 의무고용율이 0.46%에 불과하고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적합직종 없음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을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하는 편견과 차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더 이상 이 같은 주장으로 기업의 사회연대



책임 무시와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평균 0.86%, 지방자치단체의 고용현황이 평균 1.1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무한경쟁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또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사회보장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연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 없다. 3월 한 달간 중앙일간지를 통한 자살건수만 해도 4건이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또한 하루종일 집안에만 방치되어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6월이면 실업대란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사회안전망도 구축되지 않은 무망비상대에서 해고 우선순위라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은 더 이상 남의 도움으로, 배려로 살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렇듯 장애인도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하루만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져야 하며, 정부와 기업은 더디더라도 사람을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는 정부와 전경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 2%에 솔선수범하여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당당한 경제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현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더욱 더 삶의 버거움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정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전경련등 기업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회 연대의식을 갖고 장애인의무고용 2%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정부와 기업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